



표절 예방과 대학도서관의 역할

글 | 김 종 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장
kjchul@dongguk.edu

끊이지 않는 논문 표절 논란

고위 공직자와 교수들의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와 관련한 기사가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문대성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을 비롯하여 7명의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하여 논문 표절 시비가 있었다(경향신문 2012). 곧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면 아마 여러 명이 이 문제로 국회의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낮익은 풍경이 연출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도 않을 것이며, 국민들도 이를 고위 공직자들의 하나의 통과리례쯤으로 치부하고 말 것이다. 지난 12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수의대 강수경 교수의 논문 연구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는데(조선일보 2012), 이는 2005년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연구윤리 문제는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표절을 비롯한 연구윤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에서 총리감으로 평가받던 국방장관이 논문 표절로 장관직을 사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경향신문 2012),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표절을 한 사람은 표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2005년 이후 정부 및 학술단체, 대학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해방 후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죄의식 없이 해오던 관행들이 사회적인 병폐로 만연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병폐를 근절하려면 범사회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연구윤리와 표절

연구윤리 문제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삼는 연구에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생명윤리이고, 두 번째는 연구 진실성과 관련한 윤리로서 위조, 변조, 표절을 포함하는 연구 부정 행위이다. 그러면서 적절하지 못한 저자 표시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 부적절 행위도 연구윤리 차원에서 거론될 수 있다(정일섭 2006). 그래서 연구부정 행위는 전체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행위, 표절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표절은 연구 부정 행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인용 범위의 문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과 관련이 있어 연구부정 행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한양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서는 표절을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 결과물 또는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성평모 등 2006). 여기서 말하는 표절은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침해와 같은 뜻으로 쓰이거나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다(남형두 2009).

표절에 대하여 「저작권법」에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제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3(저작물의 공

정한 이용), 제37조(출처의 명시) 등을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이용을 하되, 출처 표시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확립과 표절 예방을 위한 노력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은 연구부정 행위가 발생하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검증하고 있다(연구윤리정보센터 편, 2012).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는 온라인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원과 연구관리자를 위한 연구윤리」 등 각종 교육 책자를 발간하여 연구윤리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표절이 타인의 아이디어와 표현을 자신의 것인 양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발표하는 것이라고 할 때, 정당한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합리적 출처 표시, 재인용 문제, 자기 표절·중복 게재, 공저 문제, 박사학위 논문 재사용 문제, 학문간 편차, 표절판단의 시점, 표절의 시효 문제, 표절 판단의 주체 문제(남형두 2009) 등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에 의한 표절의 기회가 날로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각 대학들은 대학원생은 물론 학부생의 표절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표절검색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수업에 활

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톨릭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에서 표절검색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에서의 표절검색프로그램의 활용도 필요하지만, 표절 예방을 위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통안전 교육과 같이 초·중·고교에서 선행교육이 있어야 하고, 대학에서는 대학원생만이 아닌 학부생을 대상으로 표절 예방을 비롯한 연구윤리 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기태 교수는(2008) 교육 현장 등에서 자세한 인용의 조건과 방식에 대하여 규정을 만들어 표절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표절은 범죄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모든 전공에 걸쳐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국내의 대학들은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교수나 대학원생 등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어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손화철 교수는 연구윤리의 연장 선상에서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학습 세계의 기본적인 규칙들인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연구윤리정보센터 편, 2012).

대학도서관의 역할

그래서 대학에서 가장 많은 학술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인 대학도서관이 학생 및 연구자들에 대한 학술 자료 제공만이 아니라, 저

작자와 이용자를 증개해주는 사회적 기관으로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표절 예방 및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한 가지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학도서관은 WEB DB나 전자저널 등 방대하고 다양한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교원이나 대학원생, 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료 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ENDNOTE'나 'REFWORKS'와 같은 참고문헌관리프로그램의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서관에 따라서는 논문작성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도서관은 단순한 학술정보 제공 기관에서 벗어나 학술연구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동철 교수는(2007) 표절의 유형과 올바른 인용 방식이라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타 학문 분야보다는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분야와 관련성이 크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진국 대학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표절 방지와 올바른 인용 방식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Jackson 2006). 실제로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인 출처 표시를 위해서는 문헌정보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도서관은 2차 정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관으로 각종 문헌의 서지사항 표시 방법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학술논문의 인용 및 서지사항 기술에 대한 연구를 꾸

준히 해오고 있다.¹⁾ 따라서 도서관에서 합리적인 인용 및 출처 표시를 중심으로 한 표절 예방 교육을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아니지만 이미 전문 도서관에서는 2009년부터 기관 연구자들의 표절 방지 등 연구윤리 확립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도서관)에서는 2009년에 신입 원장의 지시로 창의적인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자기 표절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0년부터 연구보고서에 대한 중복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KSLA)는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회원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강소선 등 2012). 그래서 강소선은(2012) 인용 및 참고문헌 달기에 대한 전문성 확보, 좋은 글 쓰기 교육, 저작권 문제 등 연구윤리에 대한 다양한 분야가 모두 도서관 업무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대학도서관에서는 대학 내 기관별 역할 조정과 교육 내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데, 이는 지금부터라도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원 등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담당하고, 도서관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

학도서관 사서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대학도서관에서의 표절 예방 교육이 대학의 바람직한 연구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㉞

[참고문헌]

- 강소선 등. 2012. 도서관이 도서관이 아니야! 연구중복 검증서비스. 『톡톡 튀는 도서관 정보 서비스』. 대전 : (사)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 경향신문. 2012. <사설>19대 국회를 '표절 국회'로 전락시킬 수는 없다. 2012.5.8.
- 고전. 2009. 대학의 학술윤리 관련 규정 및 교육 개선 방안. 『교육법학연구』, 21.2 : 1-25.
- 곽동철. 2007. 학술논문에서 표절의 유형과 올바른 인용 방식에 관한 고찰. 『문헌정보학회지』, 41.3 : 103-126.
- 남형두. 2009. 표절사례연구. 『법조』, 632 : 259-320
- 성광모 등. 2006. 『학술단체 및 연구자를 위한 윤리헌장 제정 및 연구 도덕성 제고 방안 연구』. 서울 : 한국학술진흥재단.
- 연구윤리정보센터 편. 2012. 『함께 나누는 연구윤리 이야기』. 대전 : 연구윤리정보센터.
- 조선일보. 2012. 황우석 공격하던 교수가 즐기세포 논문 14편 조작. 양승식. 2012.12.5.
- 윤소정, 최용성, 최병학, 양삼석. 2010. 대학생의 연구윤리교육에서의 표절 실태 및 대안 연구. 『윤리교육연구』, 24 : 315-335.
- 정일섭. 2006. 이공계 연구윤리를 생각하며. 『대학교육』, 144 : 54-58.
- Jackson, Pamela A. 2006. "Plagiarism Instruction Online : Assessing Undergraduate Students' Ability to Avoid plagiarism."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7(5) : 418-428. 재인용 : 곽동철. 2007. 학술논문에서 표절의 유형과 올바른 인용 방식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3 : 103-123.

1) 대표적인 연구자로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남석 명예교수를 들 수 있다. 김남석 교수는 2002년에 공저로 『주·참고문헌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2006년에 편저로 『학술논문서지기술시리즈 I-V』